고전적 자유주의 대(對) 아나코-캐피탈리즘

Classical Liberalism versus Anarchocapitalism

Jesús Huerta de Soto*

번역: 김경훈 연구원 (미제스 코리아)

1 고전적 자유주의의 치명적 오류 2

2 불필요한 존재로서의 국가 3

3 왜 국가주의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가 7

4 국가권력 제한의 불가능성 9

5 왜 아나코-캐피탈리즘이 인류의 미래가 되어야 하는가 12

6 결론: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명적 함의 14

*현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중 한명이다. 한스-헤르만 호페, 외르크 귀도 휠스만과 함께 유럽 오스트리아학파 학계의 거두로서, 마드리드에 소재한 후안카를로스 국왕 대학교에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석사 학위 과정을 이끌고 있다. 데소토는 아나코-캐피탈리즘이 이론적으로 가장 우월한 이념이라고 믿는다. 2006년에 영어로 출판한《화폐, 은행 신용, 경기변동(*Money, Bank Credit, and Economic Cycles*)》에서, 데소토는 현행 중앙은행 시스템이 사유재산권, 도덕, 그리고 안정된 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데 성공했다.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자유주의 사상은 그 이론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모두에서 역사적 갈림길에 도달하였다. 베를린 장벽과 1989년부터 시작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유감스럽고 과장된 표현을 빌리자면) 역사의 종언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날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국가주의가 전 세계에 만연해있으며,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엄청나게 사기가 꺾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의 쇄신(aggiornamento)은 필수적이다. 최근의 경제과학적 진보,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이 제공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자유주의 교리를 철저히 수정하고 최첨단으로 끌어올려야할 시기가 왔다.

이러한 교정은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려고 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시도가 실패했다는 점,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가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날의 경제과학이 설명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발생시키는, 기업가정신이 주도하는 사회적 협력 과정에 관한 역동적인 이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이론은 사회협력의 아나코-캐피탈리스트 체제에 관한 전면적인 분석으로 확대되고 또 변형될 수 있으며, 아나코-캐피탈리즘이 인간 본성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실현가능한 유일한 체계임을 드러낸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과학적 그리고 정치적 전략에 대한 일련의 부가적이고 실천적인 고려사항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아나코-캐피탈리즘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및 오류를 시정할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치명적 오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그들의 이상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그 자신을 파괴할 잠재력을 가진 씨앗을 포함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제도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 이해되는 (최소국가 포함)

국가의 필연적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이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접근법에서 엄청난 오류를 범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정치적 행동계획과 경제학 원리들의 집합으로 간주하지만, **국가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면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자유주의의 목적을 상정한다.**

그러나, 오늘날(21세기의 첫 10년)의 경제과학은 이미 다음 사안들을 입증하였다:

1. 국가는 불필요하다.
2. 국가주의는 (심지어 최소국가주의라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3. 인간의 본성을 감안한다면, 일단 국가가 존재할 경우 그 힘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들 각각을 논평해볼 것이다.

불필요한 존재로서의 국가

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균형(equilibrium)에 대한 잘못된 패러다임만이 공공재 범주에 대한 신념을 장려할 수 있다. 공공재는 잠정적으로 자명하게 (prima facie) **1. 공동공급과 비경쟁적 소비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며, 2. 그러한 공공재에 필요한 자금을 모든 사람이 조달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적 강제, 즉 국가라는 독점기관**의 존재를 정당화한다.

"공공재", 즉 시장에서는 해결될 수 없어 보이는 공동공급과 비경쟁적 소비의 모든 (실재적인 혹은 외관상의) 사례의 출현은, 사실 기술 그리고 법적 혁신을 통해 그러한 사례를 위한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기업가적 창의성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 역시 동반한다. 그리고 기업가적 발견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자원이 공공의 것으로 선언되지 않고 기업가정신의 자유로운 행사가 허용되는 한, 각각의 창조적이고 기업가적인 행위의 산물에 수반하는 사적인 전용(appropriation)이 허용되는 한에서 말이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등대 제도는 수년 동안 민간의 소유와 자금조달을 통해 유지되었으며, 선원협회, 항만료, 자생적인 사회 모니터링 등 오늘날의 국가주의자 경제학 교과서가 가장 전형적인 "공공재" 사례로 묘사하는 "문제들" 역시 일종의 민간절차(private procedures)로 여겨지며 효과적인 해결책이 제공되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서부지역에서도, 광활한 땅에 있는 소떼와 관련된 재산권을 정의하고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가적 혁신이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가축의 몸에 인두를 지져 소유를 표기하는 것, 말을 타고 무장한 카우보이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그리고 특히 철조망의 개발과 도입은 매우 저렴한 가격의 광범위한 대지를 효과적으로 분리를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원들을 "공공의 것"으로 선언하고, 민간의 소유를 차단하고, 국가기관이 관료적으로 관리하였다면 상기한 기업가적 혁신의 창조적 흐름은 완전히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대부분의 길거리와 고속도로에 관한 무수히 많은 기업가적 혁신의 채택, 즉 차량 및 시간당 통행료 징수, 보안 및 소음공해에 대한 민간관리 등의 도입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혁신들이 더 이상 어떠한 기술적 문제도 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길거리와 고속도로라는 재화는 "공공의 것"으로 선언되어 민영화 그리고 창조적이고 기업가적인 경영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1. 불필요한 국가의 존재, 2. 국가가 형편없이 제공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와 자원의 본질, 그리고 3. 국가가 (거의 항상 그 재화 혹은 자원들의 공공적 성격을 구실로) 독점하여 공급하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오늘날의 고속도로, 병원, 학교, 공공질서 등을 대부분 국가가 공급하고 있고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의 치밀한 분석을 하지 않고 국가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사람들은 자생적인 시장질서, 기업가적 창조성, 그리고 사유재산을 통하여 상기한 자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각 개인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수요에 맞추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일반적인 품질로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게다가, 사람들은 국가가 무방비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주식개미, 서민소비자와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믿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모든 경우에 있어 국가는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실제로는 해친다. 이를 고려한다면 국가의 존재에 대해 가장 어설프고 퀴퀴한 정당화 중 하나는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머레이 라스바드는 현재 국가가 공급하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반드시 민영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도, 상기한 재화들은 둘째 그룹에 속한다. 국가의 소멸은 고속도로, 병원, 학교, 공공질서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들의 공급을 더 풍부하게 하고, 평균적으로 더 높은 품질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될 것임을 의미한다. (시민들이 현재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실제 비용과 관련하여 항상 그러하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제도적 혼란과 공공 무질서(disorder)의 역사적 사건들, 예컨대, 스페인 내전과 제2공화국, 혹은 오늘날의 콜롬비아와 이라크의 경우, 이러한 재화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무질서는 사실 국가가 만들어낸 상황이다. 국가는 언제나, 모든 단계에서 자기자신의 해체와 민영화보다는 (국가의 강압적 존재를 더욱 강력하게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무질서를 선호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자들이 이론상 국가가 마땅히 해야한다고 부여한 과제들을 최소한의 효율성으로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심지어 민간의 기업가들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재산권은 사회절차를 조정하고 추진한다. 재산권의 정의, 취득, 이전, 교환, 방어에 폭력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기관, 즉 국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반대로, 국가는 언제나 수많은 합법적 재산권을 짓밟고, 이를 매우 허술하게 보호하며, 사람들이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대우하는 방식을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로부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타락시킨다.

법체계는 (특히 소유권에 대한) 인간의 본성과 양립할 수 있는 일반적 법원칙의 진화적 발현이다. 따라서 법을 결정짓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 (민주

적이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그러하다.) 대신에, 법은 비록 진화적인 방법으로 발견되고 정리되지만, 대체로 판례와 원칙에 입각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본성을 수용한다.

(우리는 법적 판결과 재판에 대한 불균형한 국가지원에서 비롯되는 영국의 보통법체계에 비하여, 보다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본성(abstract and doctrinal nature)을 가진 로마와 대륙의 법전통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영미법의 판결들은, 각각의 사건의 구체적이고 지배적인 상황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온갖 종류의 장애적인 기능들(dysfunctions)을 구속력 있는 판례법을 통하여 법제도에 도입한다.) 법은 진화적이고, 관습에 의존한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다 선행하며 독립적이다. 법을 정의하고 발견하기 위해 강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어떤 기관도 요구되지 않는다.

국가는 법을 규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변호할 필요도 없다. 민간보안회사가 상당히 보편화된 요즘, 이 점은 특히 명백해져야 한다. 심지어 역설적이게도, 많은 정부기관도 민간보안회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 글은 오늘날 "공공재"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민간의 제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수많은 구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선험적 지식이 부족한 것은 그저 순진한 것이지만, "모르는 곤경보다 아는 곤경이 더 낫다(better the devil you know than the devil you don't)"라는 격언에 입각하여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순박한 반대의 근거가 된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의 진취적인 개인들이 특정한 문제에 대한 어떤 기업가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허가된다면, 과연 어떤 해결책이 발견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기업가정신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 정말 작동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가 강제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사회과정의 범위까지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가장 회의적인 사람마저도 인정해야만 한다.

시장의 자유롭고 자생적인 질서가 저해되는 영역에서는, 언제나 어려움과 갈등이 발생한다는 정확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구스타프 드 몰리나리(Gustav de Molinari)를 시작으로 하여, 오늘날의 아나코-캐피탈리스트들이 대안적 법체계를 지지하는 민간보안과 민간방어기관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여러가지 예측을 제시해왔던 것과 무관하게, 자유의 이론가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다: 우리가 국가없는(stateless)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음에도, 즉, 기업가정신의 창조적 본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음에도, 어떤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창의력을 쏟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결국 극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1)]

경제과학은 시장이 작동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국가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왜 국가주의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가

사회주의가 불가능하다는 오스트리학파의 경제학 이론은 국가주의의 불가능성에 관한 완전한 이론으로 확장되고[2)] 변형될 수 있다. 국가주의는 **제도적 침해의 독점을 가진 기관, 즉 국가를 이용한 간섭, 규제, 통제 등의 강제적 명령을 통해 사회의 어떤 생활영역을 조직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국가는 그것이 간섭을 시도하는 사회적 협력의 과정, 특히 화폐와 은행[3)] 법의 발견, 정의의 보급, 공공질서(범죄행위의 예방, 억압, 처벌로 이해됨)의 영역의 어떤 부분에서도 조정 목표(coordination goals)를 달성할 수 없다. 바로 다음의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a. 국가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하며, 이 정보는 사회적 과정에 매일 참여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분산되어 있거나, 분산된 형태로만

1) Israel M. Kirzner, *Discovery and the Capitalist Process*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p. 168.

2) Jesús Huerta de Soto, *Socialismo, Cálculo Económico, y Función Empresarial*, 3rd ed. (Madrid: Unión Editorial, 2005), pp. 151–53.

3) Jesús Huerta de Soto, *Money, Bank Credit, and Economic Cycles*, Melinda A. Stroup, trans. (Auburn, Ala.: Mises Institute, 2006) (originally published in Spanish in 1998 as *Dinero, Crédito Bancario, y Ciclos Económicos*, 3rd ed. (Madrid: Unión Editorial, 2006).

발견된다.

b. 간섭하는 기관이 조정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명령에 필요한 정보는 대체로 그 본성상 암묵적(tacit)이거나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inarticulable)이며, 따라서 완벽하게 명료한 것으로 전달될 수 없다.

c. 사회가 사용하는 정보는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성의 결과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므로, 내일에 생성되어 정확히 내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간섭의 대리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오늘에 전달될 가능성은 확실하게 없다.

d. 마지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 명령들에 의해 복종당하고, 국가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 그것의 강제적 성격은 국가간섭기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며, 과오조정(maladjusting)이 아니라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정보의 기업가적 창조를 막는다.

국가주의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련의 왜곡되고 매우 해로운 주변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국가주의는:

1. 무책임을 조장한다. (정부당국은 간섭에 따르는 진정한 비용을 모르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2. 환경이 공공재로 선언되고 민영화되지 않을 때 환경을 파괴한다.

3. 법과 정의의 전통적 개념을 부패시키며, 그것들을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 명령으로 대체한다.[4)]

4. 개인들의 행위에 모방적 부패(imitative corruption)를 초래하여, 사람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법과 도덕을 점점 더 덜 존중하게끔 변하게 만든다.

상기의 분석은, 우리로 하여금 만약 오늘날에 특정한 사회가 번영한다면, 그들은 **국가 때문이 아니라 국가에도 불구하고 번영한다고** 결론짓게 한다.[5)] 만약 그러한 사회가 있다면,

1. 많은 사람이 여전히 실질적인 법(substantive laws)에 예속되는 행위 양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

4) F.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A New Statement of the Liberal Principles of Justice and Political Economy*, 3 vo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1979).

5) Carlos Rodríguez Braun, *A Pesar Del Gobierno: 100 Críticas al Intervencionismo con Nombres y Apellidos* (Madrid: Unión Editorial, 1999).

2. 상대적으로 자유의 더 큰 영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3. 그러한 사회의 국가가 변함없이 어설프고 맹목적인 명령을 내리는데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도 불구하고 번영하는 것이다. 게다가, 자유의 가장 미미한 증가조차도 번영에 엄청난 활력을 부여하는데, 이것은 문명이 국가주의의 방해가 없다면 얼마나 멀리 진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우리는 국가가 현재 (형편없고 비싸게) 제공하는 "공공재"를 통해서 국가를 식별하는 잘못된 신념과, 국가의 소멸이 반드시 국가가 제공하는 가치있는 서비스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잘못 결론내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논평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결론은 모든 수준에서 (특히 명백하게 어떤 국가도 통제력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 교육제도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세뇌가 우리 주변의 환경, 즉 정치적 올바름의 기준이 독재적으로 강요되는 현대사회의 환경과, 현실에 안주하는 다수에 의해 합리화되는 현상유지의 경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도출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수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진리를 외면한다: **국가는 소수가 타인을 희생시켜 기생하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소수가 아닌 타인들은 처음에는 착취당하고, 그 다음에는 타락하며, 종국적으로 정치적인 떡고물(favors)을 받아먹기 위해 외부자원(세금)을 지불하게 된다.

국가권력 제한의 불가능성

일단 국가가 한번 존재한다면, 그것의 권력확대는 결코 막을 수 없다. 한스-헤르만 호페가 보여주듯이, 어떤 형태의 정부(왕-소유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절대군주제같은 체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상황을 피하는데 보다 장기적으로 조심스럽다)는 다른 형태의 정부(다음 선거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인센티브가 없는 민주주의같은 체제)에 비해 권력의 확대나 무언가에 간섭하는 점에 보다 덜한 경향을 보인다.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는 간섭주의의 조류가 어느정도 덜 한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분석은 다음을 반박할 수 없다: **국가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6] 국가는 폭력의 독점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인간본성과 혼합되는 경우에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국가는 인간본성의 가장 근본적인 욕정과 폭력성을 불러일으키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자석처럼 기능한다. 사람들은 국가의 명령을 피하려고도 시도하지만 가능하다면 그것의 독점적 권력을 이용하려고 한다.

게다가, 특히 민주적 맥락에서의 특권을 부여받은 이익집단의 행동, 정부의 근시안적 사고와 투표매수의 현상, 정치인들의 과대망상적 본성, 관료제의 무책임성과 맹목성 등은,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하고 폭발적인 칵테일마냥 서로 혼합된다. 이러한 혼합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역설적으로 정치인들과 사회적 "지도자들"이 그것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더 많은 간섭을 부추기고 정당화한다. 이러한 정당화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개입은 기존의 문제는 더욱 악화시키면서 단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낼 뿐이다.

국가는 모두가 의지하고 숭배하는 "우상"이 되었다. 국가숭배사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사회적 질병이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제때에 발견되어 국가에 의해 해결될 수도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도록 가르침받는다. 우리의 운명은 국가의 손에 달려 있고,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인들은 우리의 복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보장하는 존재로 상정된다. 이를 인간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창조적 본성(자기 자신의 미래를 불가피하게 불확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본질적 특성)에 반항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법을 제시해주는 수정구슬을 요구한다. 대중의 이러한 유아화(infantilization)는 정치인과 사회적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정당화하고, 인기를 얻고, 우위를

6) Hans-Hermann Hoppe, *Democracy—The God that Failed: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Monarchy, Democracy, and Natural Order*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2001).

점하고, 통치능력을 보장받는다 게다가 지식인, 교수, 사회공학자들 역시 이 오만한 권력의 폭정에 동참한다.

가장 존경할 만한 교회와 종교 교단들조차도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실패하였다: **오늘날, 국가숭배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자유롭고,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간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엄청나게 강력한 거짓 우상이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 의해 숭배되고, 자기 통제에서 자유로워지거나 자신의 지배영역 외에서 도덕적 또는 종교적 충성심을 가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사실, 국가는 선험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를 지금껏 관리해왔다: 국가는, 모든 곳("자본주의", 이윤에 대한 욕망, 사유재산)에서 희생양을 만듦으로써, 사회갈등과 악의 근원이 정부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교묘하게 또 체계적으로 주의를 돌려왔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희생양들에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중의 분노의 대상으로, 도덕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들로부터 가장 강력하고 극심한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번 세기에 이들 중 그 누구도 이러한 속임수를 꿰뚫어 보지 못하였고, 국가숭배주의가 종교, 도덕, 그리고 인류문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감히 비난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7)]

1989년의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사회주의의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최고

---

7) 아마도 최근 들어 가장 눈에 띄는 예외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찬란한 저서《나자렛의 예수(*Jesus of Nazareth*)》에서 나타난다. 이 책에서 교황은 악마가 우리 앞에 놓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유혹에 대해 반성하며, 국가와 정치권력이 적그리스도의 제도적 구현이라는 사실을 진술한다. 이 책을 아주 조금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 "사탄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악마를 숭배해야 한다고 제안할 정도로 멍청하지 않다. 사탄은 단지 우리가 계획되어있고 철저하게 조직된 세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며 합리적 선택을 제안할 뿐이다. 그러한 세계는 하나님께서 사적인 배려로 자신의 지위를 가지시되 우리의 본질적 목적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으시는 세계이다. 마치 새로운 성경과도 같은《세계평화와 복지로의 열린 길(*The Open Way to World Peace and Welfare*)》에서, 솔로비요프(Soloviev)는 적그리스도의 진정한 메세지가 웰빙과 이성적 계획에 대한 숭배라고 말했다."

Joseph Ratzinger, *Jesus of Nazareth*, Adrian J. Walker, trans. (London: Bloomsbury, 2007), p. 41. 레드포드(Redford)는 James Redford, "Jesus Is an Anarchist," Anti-state.com (2001) 에서 훨씬 더 단정적이지만 비슷한 발언을 하였다.

의 역사적 실례를 제공하였듯,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가들과 정치인들이 국가권력을 제한하려 했던 것의 거대한 실패는, 국가주의의 불가능성 정리를, 특히 자유주의적 국가가 자기모순적(만약 자유주의적 국가가 강제적이라면, 심지어 그것이 "제한된" 국가일지라도)이며 이론적으로 불가능(국가의 존재를 일단 받아들이면 그 힘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하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요컨대, 법치국가(law-based state)는 달성불가능한 이상이자 "뜨거운 눈, 음탕한 처녀, 뚱뚱한 멸치, 둥근 사각형",[8] 혹은 보다 명확하게는, "사회공학자"들의 생각이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완전시장" 혹은 "완전경쟁모델"을 말하는 것만큼이나 모순적인 용어이다.[9]

왜 아나코-캐피탈리즘이 인류의 미래가 되어야 하는가

필자는 이 글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아나코-캐피탈리즘의 이론적, 정치적 분열을 분명히 밝혔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그 자체가 아나코-캐피탈리즘으로 진화하기 위한 자연적인 단계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주의는, 인간본성에 반하는 이념이다. 왜냐하면:

1. 국가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법을 정의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영역을 포함)에서 강제력을 체계적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2. 그리하여 인간본성의 가장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표현인 창조성과 기업가적 조정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국가주의는, 무책임함과 도덕적 부패를 조장하고 확대한다. 왜냐하면:

1. 인간행위의 초점을 정치권력에 맞추며,
2. 각각의 정부행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알 수 없다는 불가피한 무지의 맥락 안에 있기 때문이다.

---

8) Anthony de Jasay, *Market Socialism: A Scrutiny: This Square Circle* (Occasional paper 84)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90), p. 35.

9) Jesús Huerta de Soto, "The Essence of the Austrian School," lecture delivered at the Bundesministerium für Wissenschart und Forchung, March 26, 2007, in Vienna; published in Procesos de Mercado: Revista Europea de Economía Política 4, no. 1 (Spring 2007): 343–50, see esp. 347–48.

이러한 국가주의의 영향은 국가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비록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의 힘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시도를 다하기는 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는 실현 불가능하고 달성불가능한 유토피아를 목표로 삼는 이념이다.

국가의 힘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열심이었던 우리의 선조들, 즉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유토피아적 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그들 사상의 논리적 결론이 아나코-캐피탈리즘을 함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는데 실패했으며, 일관성없는 이념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19세기의 유토피아적이고 순진무구한 고전적 자유주의를, 리버테리언 자본주의, 사유재산 아나키즘, 또는 보다 단순하게 **아나코-캐피탈리즘**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우며, 진정으로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150년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21세기 초에는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거의 20년 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성장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아나코-캐피탈리즘(즉, "리버테리어니즘")은 법, 정의, 그리고 공공질서를 포함하는 모든 서비스가 전적으로 자발적인 사회협력의 과정(현대경제과학 연구의 중심주제)을 통해 제공되는 자생적 시장질서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인간의 창조성과 기업가적 조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방해가 없고, 따라서 문제해결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증대되며, 폭력에 대한 독점을 가진 조직들(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갈등, 비효율, 과오조정이 근절된다.

더욱이, 아나코-캐피탈리즘은 국가가 창출하는 부패한 인센티브를 없애고, 대신에 가장 도덕적이고 책임감있는 인간의 행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국가권력의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조직적으로 이용하여 특정 사회집단(선택을 박탈당하고 복종하기를 강요받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어떤 독점적 기구(국가)의 출현을 막는다.

아나코-캐피탈리즘은 인간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본성에 도덕적인 행동

패턴을 갈수록 더욱 내재화하는 능력을 영구적으로 갖추었다고 완전하게 인정할 만한 유일한 제도로서, 그 정의상, 누구도 독점적이고 체계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요컨대, 아나코-캐피탈리즘 체제 하에서, 어떤 기업가적 계획이라도 충분한 자발적인 지원을 끌어들인다면 시도될 수 있으며, 따라서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발적 협력의 환경 속에서 가능한 많은 창조적 해결책들이 고안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법체계에 근거하여 모든 종류의 보안, 범죄예방, 영토방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의 역동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가를 꾸준하게 교체하는 것은, 정치와 과학의 어젠다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일어나야 할 가장 중대한 사회변화이기도 하다.

결론: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명적 함의

18세기와 19세기에 앙시앵 레짐에 대항한 과거 고전적 자유주의 혁명과, 오늘날 21세기의 아나코-캐피탈리스트 혁명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연속성이 존재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유토피아적 자유주의가 실패하게 된 배경을 이해했고, 이를 과학적인 자유주의로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순진했으며, 20세기 전체에 걸쳐 결코 달성불가능한 이상을 추구하면서 결국 인류 역사상 최악의 국가주의 폭정의 문을 열고 말았다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안다.

아나코-캐피탈리즘의 메세지는 현저하게 혁명적이다.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결국 혁명적인 것이다: **아나코-캐피탈리즘은 국가를 해체하고 민간기관, 민간협회,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경쟁적인 시장과정과 네트워크로 대체하고자 한다.** 아나코-캐피탈리즘은 또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에 있어서 혁명적이며, 특히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혁명적이다.

a. 과학적 혁명. 한편으로, 경제과학은 모든 사회영역으로 확장된 자생적 시장질서의 일반이론이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과학은 자신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법, 정의, 공공질서 등)에서 발생하는 국가주의에 의한 사회적 불협동에 대한 분석도 포함한다. 또한, 국가를 해체하는 다양한 방법,

아나코-캐피탈리즘을 향한 이행과정, 또 현재 "공공적"이라고 간주되는 모든 서비스를 완전히 민영화하는 것의 효과와 방법에 대한 연구는, 경제과학의 필수적인 연구분야 중 하나이다.

b.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혁명. 국가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업가적 환경에서 가능한 인간의 눈부신 업적, 진보, 발견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정부의 지속적인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문명적 성취가 점점 더 세계화되는 세계에서 발전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주의의 힘으로서는 결코 이룩할 수 없는 정도의 복잡성을 가진 문명적 성취이다. 인간본성으로서의 창조적 힘이 정부의 갑옷에 가장 얇은 틈새에 뚫고 들어가 필연적으로 그 결실을 내놓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국가주의를 완전히 없앤다면 우리의 문명은 한계 없이 팽창할 것이다. 국가가 우리를 제한한다는 비뚤어진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일단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그리고 국가가 우리의 기업가적 창의성의 원동력을 차단함에 따라 매일같이 엄청난 진보의 기회가 제거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면, 인류의 문명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하지만 지금의 우리로서는 결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로의 발전을 바라면서, 사람들은 개혁과 국가의 해체를 요구하는 사회적 소요에 대거 동참하게 될 것이다.

c. 정치적 혁명. 정치적 투쟁은 상기한 a와 b에 기술된 내용보다는 부차적인 것이다. 국가를 민주적으로 제한하려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노력을 계승하여, 우리가 항상 가장 덜 간섭주의적인 대안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나코-캐피탈리스트는 이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아나코-캐피탈리스트는 자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야한다는 점을 안다. 아나코-캐피탈리스트는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의 완전한 해체라는 것을 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는 자신의 창의력과 모든 정치적 행동을 매일같이 추진한다. 올바른 방향을 향한 진보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국가를 완전히 해체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포기하는 실용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일반 대중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우리는 국가의 해체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구해야 한다.[10)]

예컨대, 아나코-캐피탈리스트의 정치적 어젠다는 국가의 크기와 권력을 축소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든 영역에서의 지방 및 지역적 탈중앙화, 리버테리언 민족주의, 도시국가체제의 부활, 분리독립을 통해서 말이다.[11)] 또한 소수에 대한 다수의 독재를 막고, 제도적인 투표보다는 점점 더 발로 하는 투표(vote with their feet, 물리적 이동 등의 자발적 참여나 철수를 통해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는 것)를 증가시키고자 한다. 요컨대, 아나코-캐피탈리스트의 목표는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에 예속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종교, 사설단체, 인터넷 네트워크 등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세상이다.[12)]

더욱이, 정치적 혁명이 피를 흘려야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적 혁명은 사회교육과 발전의 필요한 과정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막는 기만, 거짓말, 그리고 강제를 저지하려는 민중의 아우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예컨대, 동유럽의 사회주의 종식을 가져온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벨벳혁명은 둘 다 기본적으로 무혈혁명이었다. 이렇게

10) Jesús Huerta de Soto, "El Economista Liberal y la Política," in *Manuel Fraga: Homenaje Académico*, vol. 2 (Madrid: Fundación Cánovas del Castillo), pp. 763–88; reprinted at pp. 163–92 of *Nuevos Estudios de Economía Política.* 예컨대, 현재의 정치적 어젠다에서 리버테리언 자본주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는, "Libertarians Rising," which appeared in the Essay section of Time magazine in 2007. Michael Kinsley, "Libertarians Rising," Time (October 29, 2007), p. 112 이다.

11) Jesús Huerta de Soto, "Teoría del Nacionalismo Liberal," in *Estudios de Economía Política*, 2nd ed. (Madrid: Unión Editorial, 2004); idem, "El Desmantelamiento del Estado y la Democracia Directa."

12) Bruno S. Frey, "A Utopia? Government Without Territorial Monopoly," *The Independent Review* 6, no. 1 (Summer 2001): 99–112.

중요한 혁명의 결과를 따라, 현재의 정치체제가 평화롭고[13] 법적으로[14] 허용하는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한다.

아나코-캐피탈리스트의 이상을 향해, 근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길이 끊임없이 발견되리라는 점에서 우리의 미래는 활기차다. 비록 이러한 미래가 오늘날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느껴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상의 어느 순간에나, 가장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조차도 깜짝 놀라는 거대한 변화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해왔음을 목격할 수 있다. 누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것을 시작으로 동유럽의 공산주의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5년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역사적 변화는 이제 가속하는 과정에 접어들었으며, 그것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사에서 최초로, 인류가 국가를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제거함으로써, 국가라는 것을 어둡고 비극적인 과거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장이 시작될 것이다.

---

13) 우리는 폭력 행위가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엄격한 조건에 대한 황금시대의 스페인 스콜라학자들의 처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1.) 가능한 모든 평화적 수단과 절차를 먼저 시도해야 하며, (2) 그 행위는 방어적(구체적인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이어야 하고 결코 공격적이지 않아야 하며, (3) 당한 피해에 비례하는 수준이어야만 하며, (4) 무고한 희생자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다 해야 하며, (5) 합리적인 성공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자살과 다름없다.) 이것들은 현명한 원칙이며, 여기에 더해 나는 참여와 자금조달이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이러한 원칙들 중 하나라도 반하는 어떠한 폭력 행위도 자동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며 공개적으로 객관적인 최악의 적으로 상정된다. 마지막으로, 후안 데 마리아나 신부(Father Juan de Mariana)의 폭군에 대한 정당한 살해 이론도 관련이 있다. Juan de Mariana, *De Rege et Regis Institutione* (Toledo: Pedro Rodríguez, 1599).

14) 라스바드가 지적한 바 처럼, 현행법을 어기는 것(대체로 행정명령을 어기는 것)이 딱히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이러한 행위는대부분의 경우 편익보다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